

민주당-광주시·전남도 영산강 간담회

“보 건설 잠정중단” “준설로 수량 늘려야”

수질개선-수량확보 우선순위 시·도 이견 점점 없는 평행선 주장만...입장차 재확인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특위 영산강사업 검증팀” 주최로 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민주당의 보(淤) 건설 잠정중단 및 검증 후 추진 제안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거부사를 밝힌 것이다. 영산강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전남도가, 수질개선방식에는 전남도와 광주시가 대척점에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견 차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셈이다.

◇엇갈리는 전남도와 민주당=강기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전남도와 민주당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차원의 내부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보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보의 기능과 영산강에 미치는 역할 등을 먼저 검증한 뒤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전남도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와 관련해서도 이를 동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광주시는 광주의 하수 정비에, 전남도는 수량확보를 위한 영산강 정비 및 준설 등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운대 광주시장은 정확한 수치까지 거론하며 수질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의 우수와 오수의 분리 비율은 38%로, 이 오수가 영산강을 더럽히는 원인”이라며 “3조7000억원의 영산강 사업 예산 중 광주 하수정비에는 고작 1600억원이 배정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전체

하수정비에 2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의 예산 투입으로는 200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박 지사는 상류 수량확보, 하류 수질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남도는 간담회 전 배포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관련 입장’에서 “영산강을 기준으로 상류의 경우 수량확보가 시급해 준설 등이 필요하고 하류지역은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거·축산폐수처리·마을하수도 등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또 영산강의 오수를 제거하는데 예산이 투자돼야 한다는데는 공감

했지만 준설 오니의 양이나 예산에는 의견차를 보였다.

◇점점 없는 평행선 주장 되풀이될 듯=민주당은 박 지사의 이 같은 영산강사업 강행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4대강사업 저지에 나섰으나 텃밭인 전남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강기정 의원은 박 지사와 최인기 국회의원을 출당시키라는 환경단체의 요구와 관련해 “특위 차원에서 4대강 현장 확인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당론을 정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당의 운영원칙에 따라 처리해 갈 것이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고민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영산강사업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뒤에 도 박 지사가 영산강사업 추진을 강행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전남도는 운하가 아닌 영산강 살리기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의원들이나 환경단체들은 보 건설 등은 운하와 비슷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전남도로서는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이 때가 영산강을 살릴 적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도 모두발언에서 “과거 이 정도까지 건전화될 지는 모르고 영산강 상류지역에 4개의 댐과 영산강 하구에는 뚝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그 때마다 소명을 다한 것이며 영산강 사업도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민주당 4대 강 저지 특위는 이날 영산강 승촌보와 광주천·광주댐 현장조사를 벌였다. /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8일 오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운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민주당 4대강 저지 특위 소속 국회의원, 관계공무원, 환경단체 및 교수 등이 ‘영산강 사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과 기금의 지출 규모는 모두 312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협의 거쳐 정부안을 확정,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광주시·전남도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기간 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개 중앙관서가 요구한 내년의 예산 지출 규모는 219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조1000억원(6.9%) 늘었고 기금운용

정부부처 요구 내년 예산·기금 312조...6.9% 늘어 광주시 1조7374억, 전남도 8조156억

계획 규모는 93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원(6.9%)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외교·통일분야가 국제기구 분담금 등의 증가에 따라 올해 예산보다 11.8% 많은 3조7000억원을 요구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4조7000억원 증가해 올해 예

산보다 9.7% 많은 5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출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87조3000억원으로 7.4% 증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6.1% 감소한 3조7000억원이 요구됐고 환경분야도 5조3000억원으로 2.5% 줄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000억원 늘려 잡았

다. 올해 국토해양부 4대강 예산이 3조2200억원인 점에 비해 3조3천억원 가량을 요구할 셈이다. 아울러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필수적인 성장거점과 광역 기반시설을 닦기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도 9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정부 각 부처에 1조7374억원을, 전남도는 8조156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부처가 예산을 반영했다면 1단계는 통과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임태희 대통령실장 발탁 배경과 전망

계파색 없어 소통 강화 적임 ‘젊은 실장’ 세대교체 신호탄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통령실장에 내정한 것은 집권 하반기 국정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 내정자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전문성과 행정경험 ▲3선 의원으로서의 의정 경력 및 정치 감각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을 지낸 경륜 ▲야당이나 친박(親朴)계로부터도 거부감이 없는 온건, 합리적인 성품 등을 갖췄다는 점에서 집권 하반기 대통령 실장으로 가장 적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임 내정자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와 당선인 시절 두 차례나 비서실장으로 호흡을 맞춰 이미 두터운 신뢰 관계가 구축돼 있다는 점도 대통령실장에 내정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54세의 나이는 ‘젊은 대통령실장’으로서 청와대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세대교체’의 상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전력 발탁 배경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밖에 임 내정자는 고용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13년 묵은 숙제인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 문제를 해결, 정치력을 입증한데다 비영남권인 경기도 성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안배 조건을 충족한 것도 인

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밖에도 ‘합리적 중도보수’로 평가받고 있어 이 대통령의 ‘친시민 중도실용’ 국정기조를 구현하는데 적임자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임 내정자는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계파색이 없고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정치권의 평가를 바탕으로 당·정·청 관계의 재정립을 주도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임 내정자가 지난해 북한 측 핵심인사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등 대북 문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임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실장으로서 국민 마음을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정치적 갈등 요소는 국민의 귀로 듣듯이 충분히 국정에 반영되도록 대통령을 보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 출범에 깊이 참여한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한 뒤 “어제 오전에 (대통령을) 만났으며 ‘당·정·청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현안을 풀어 나가야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임태희 대통령실장 프로필

정통 경제관료 출신 3선 중진의원

재무부 관세국과 청와대 금융담당 행정관 등 재정·세정·금융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3선 중진의원.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 및 당선인 비서실장을 잇따라 지낸 데 이어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에 발탁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부의 ‘신(新)실세’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이 대통령의 특별지침을 받고 싱가포르를 극비리에 방문, 북한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면서 해묵은 과제인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안

해결 능력도 인정받았다.

또 경기 성남 출신의 비(非)영남권 인사로, 지역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명에 목포시민증’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호남 지역 및 야당측 인사들과도 교류 노력을 기울여 와 화합·소통의 적임자로 꼽힌다.

권익현 한나라당 교문의 사위로 부인 권혜정(49)씨와의 사이에 2녀.

▲경기 성남(54) ▲서울대 경영학과 ▲행시 24회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여의도연구소장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및 당선인 비서실장 ▲한나라당 정은 과제인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현안

오토캠핑장비 SALE최고의
상품 전국 최저가!

90% ~ 30% 의류 및 용품

월드컵경기장 정문 맞은편

백두산의 상설매장
062) 376-2585

수업과 자영으로 가는 비상구 백두산악

텐트·바캉스용품